



감축목표 달성위해 산업 및 경제 구조조정 실시하는 중국

코펜하겐 회의에서 큰 목소리

중국정부는 코펜하겐 회담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교토의정서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응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common but differentiated) 책임’ 원칙을 확립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첨예한 대립이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인도 등 핵심 개발도상국가간에 이뤄진 기후변화 협정이 공식 문서로 채택되는 데는 중국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자축하고 있다.

코펜하겐 회의 전 중국은 대국의 책임을 강조하며 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GDP 기준으로 2005년 대비 40~45%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이나, 총량 절대치 감축이 아닌 GDP 당 탄소배출 강도 감축을 목표로 삼음으로써 세계 최대 인구 보유국가에 공업 및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으로서 경제성장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진국의 기술이전 촉구

한편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세전화(解振華) 부주임은 빠른 시일 안에 교토의정서 회원국 중 선진국의 제2차 의무 이행 기간에 다량배출감소지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주임은 코펜하겐회의가 대체적으로는 성공한 편이지만 선진국들이 해당 의무이행을 도피함에 따라 자금 지원, 기술지원 등 관련 핵심문제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은 비록 개도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낙했으나 각국별 장기 지원금액과 단기

자금내역이 명확하지 않고 단기자금의 집행방식에 대해서도 확립된 바가 없다고 평가했다. 개도국의 압력으로 선진국은 기술이전체제를 수립하기로 했으나 단지 정보교류와 자문 등 기능에만 국한해 개도국에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이 없다는 의미이다.

탄소배출 감축 목표 공식화 추진

중국 기상국 정귀광(鄭國光) 국장은 2020년까지 GDP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감축하는 목표는 ‘제 12차(2011~2015년) 및 13차(2016~2020년) 개발계획’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중장기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 법적구속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에너지 절감, 에너지 효율 향상, 청정석탄, 재생가능에너지, 선진적인 원자력에너지, 저탄소 기술의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해 저탄소 공업, 건축과 교통체계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동시에 재정지원, 세수혜택, 가격과 금융 등 정책지원을 통해 체계화된 관리체제와 감독실시체제를 설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펜하겐 회담 실패의 책임은 선진국에 있어

중국사회과학원 지속발전가능연구센터의 판자화(潘家華) 주임은 이번 코펜하겐회의의 주요한 성과는 선진국의 강제 감축의무와 개도국의 자주 감축의무를 더욱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모든 선진국이 중기 감축목표를 발표했으며 주요 개도국도 잇달아 자국의 감축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이 성공적이라는 의견이다. 비록 일부 목표

내용이 명확치 않거나 감축 폭이 실제 요구에 비해 낮은 단점도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추후 기후변화 관련 담판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한다. 다만 일부 선진국의 목표에는 삼림 탄소격리와 해외시장에서의 감축 등에 대해 명확히 표시한 바 없고 선진국의 1990년 대비 2020년 감축폭도 겨우 8~12%로 발표됐는데, 이는 다수 개도국이 요구한 40%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밝혔다.

국가기후변화전문가위원회 허젠쿤(何建坤) 부주임은 향후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의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키고 관련 통계와 심사방법 체계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코펜하겐 회의 후 향후 지속적으로 남은 과제로 선진국이 2020년도까지의 감축량 지표를 설정 및 수행하고 자금지원 수행 관련 보고 및 허가 규칙을 제정하며 선진국의 자금지원 및 기술지원 관련 관리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코펜하겐회의의 담판결과가 최종 법률구속력을 가진 합의서를 도출하지 못한 근본책임이 선진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이 2020년까지의 중기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도국의 기후변화 사업을 위한 자금과 기술 지원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205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50%를 감축하고, 선진국은 8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기타 선진국과 다수 개도국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대로 협의달성하지 못했다.”는 영국 기후변화 장관 애드 밀리밴드의 의견을 정면으로 공격한 것이다.

향후 환경보호에 무게를 둔 산업구조조정 추진

중국정부는 배출감소 목표 달성과 저탄소 경제 발전을 위해 저탄소 제품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저탄소 소비를 장려하는 등 경제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산업구조 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 소비가 많고 폐기물 배출이 많은 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제품 시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2010년 1월 20일 원자바오 총리가 주재한 상무위원회에서 환경오염 유발 원으로 지목받은 낙후산업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계획에 따라 국무원은 철강, 경공업, 방직, 전자재, 석탄, 전력 등 10개 낙후

산업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및 품질 등 지표 관리를 강화하여 시장 진입문턱을 상향조정하고, 전기료 등 제품가격을 차별 적용하여 원가부담을 높이며,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인력배치를 억제하는 등 6대 조치를 발표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낙후 산업 도태 목표를 달성한 지방정부와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조, 에너지 절감 자금 지원 및 토지, 융자 등 혜택을 지원하는 장려정책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발표하는 원자바오 총리



(사진: 중국 신화사)

한편 항저우 재정국은 2010년도 재정예산지출 초안에서 저탄소경제를 포함한 7대 경제를 올 재정지원 중점분야로 지목하기도 했다. 항저우시 정부는 정부예산 3억 2,500만 위안과 정부자금 5억 800만 위안을 합친 8억 3,300만 위안을 환경보호와 생태환경유지, 시내녹화사업에 투자할 계획인데, 이는 2009년 대비 6,200만 위안이 증가한 것이다.

중국의 탄소배출은 2030~203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중국 경제의 글로벌 위상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배출량 감소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펜하겐 회의 이후 감축량 목표, 이행 및 지원을 둘러싼 국가 간 대립이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원자바오총리는 2009년 12월 21일 중국 유력 신문사인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향후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통해 코펜하겐회의를 기반으로 2010년 멕시코시티에서의 발리로드맵 관련 협상의 성공적 추진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저탄소 경제 발전을 위해 중국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 성장을 겨냥한 일련의 정책을 앞으로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L](#)